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올 임단투에서 고려할 점들

총선거와 시민운동의 동풍

21세기를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다. 과거에 써먹던 분석도구를 가지고는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온 얘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으로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정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대중들의 발언권 강화와 정치적 진출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들면 최근 총선거와 관련하여 일어난 시민운동 단체들의 총선거쟁과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포함한 향후 투쟁의 진전 계획이 그것이다.

시민운동단체가 벌이고 있는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선·낙선운동이 전혀 없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기독교세력들이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남아빠진 정치들을 고집하려는 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며, 주인의식이 크게 높아진 결과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매우 당황해 하고 전전긍긍해 하면서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특히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음모론'을 내세워 시민운동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정략적 계산에 따라 기독교를 확보해냈다. 선거법 협상결과가 그것이었다. 선거법은 선거구를 축소하여 국회의원수를 줄이기만 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정당 투표제를 거부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심지어는 선거기탁금을 1천

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 돈없는 사람들의 입후보를 막으려는 치사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공천도 당선가능성만을 내세워 밀실에서 보스의 뜻에 따라 했던 과거 방식을 되풀이함으로써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 것은 보수언론들이었다. 보수 언론들은 정치개혁의 의미나 내용을 무시하거나 축소하여 보도하였다. 그리고 시민운동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변질시켜 보수 정치권 사이의 권력 쟁탈전=지역패권을 위한 싸움으로 부각시켰다.

이렇게 하여 올 봄 총선은 또다시 지역패거리와 보스정치의 추악한 구도 속에서 보수 기득권 정당간의 흠탕물싸움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다. 몇몇 개혁 성향의 '젊은 피'가 썩은 피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낡아빠진 지역 보스중심의 정치구조 속에서 그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시민운동의 도전은 광범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 냄으로써 기득권세력이 독점해왔던 정치지배 구조에 상당한 크기의 파열구를 낸 것만은 분명하다. 그와 함께 시민운동은 물갈이공사에서 앞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정치제도개혁, 언론개혁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시민운동이 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낸다면 이 나라 정치는 한걸음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임단투 기대 밑에 가로놓인 함정

이처럼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현상을 깨트리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 사이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임단투 시기를 맞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크게 높여 각각 13.2%, 15.2%로 내놓았다. 그 근거로 양대노총은 경기 회복을 들었다.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IMF사태로 잃었던 임금과 노동조건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기대도 꽤 부풀어 있는 듯하다. 실제 경기는 업종별로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는 것

만은 분명하고 따라서 지난 2년동안 극심한 생활고와 불안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의 기대는 당연한 일이다.

권력과 자본의 처지에서 이같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표면상으로는 매우 약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1997년 의회위기 이후 권력과 자본은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워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였고, 그 대가로 1~2년 후에는 고용안정을 비롯한 생존권의 원상회복과 사회개혁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결과는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과 개혁의 후퇴였다. '국민소득 1만불, 빈민 1천만명'으로 표현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 계속되는 고용불안, 임금 복지수준의 후퇴, 그리고 정치를 비롯한 사회개혁의 좌초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제 생산적 복지나 사회복지의 확충이니 하는 청사진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사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알맹이들이 부실하니 일단투에서 노동자들이 내놓은 요구는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그만큼 권력과 자본 쪽이 만만찮게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하에 계속하여 구조조정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을 불안의 늪으로 몰고 있고, 기업들은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줄이겠다고 위협해 오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예상이 아니다. 저기다가 비정규직 확대의 가능성은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용불안의 위협수단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경우에도 자본쪽이 공간을 부릴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 벌써부터 경총은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워 5.4%만 올려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임금인상을 성과급 중심으로 밀고가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미 정부도 연봉제, 성과급 도입을 임금정책의 주요 과제로 내세운 지 오래다. 이 같은 성과급제도는 노동자 사이에 분열과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무력화시키는 독소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이 자본축이 노리는 핵심이다.

한편 노동자의 처지에서는 임금교섭을 오래 끌다 보면 성과급이든 고정급이든 많이만 오르면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낙 오랜 동안 임금이 깎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들로서는 어떻게든 이를 빨리 만회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혹은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확대 압력 때문에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이런 유혹과 함정을 뛰어넘어 목표한대로 성과를 거둔 경우에도 이번 입단투에서 노동조합이 경계해야 할 것은 한가지 더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성과에만 매몰되었던 과거의 경향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임금인상투쟁에서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계파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 입단투를 진전시켜 갈 경우 노동조합은 또 다시 회사의 울타리 안에 갇히고 기업별노조의 악순환은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입단투는 운동발전의 중대한 계기

민주노총은 '주5일제근무(주40시간 쟁취)', '구조조정중단과 임금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올해 3대 중앙투쟁 요구로 내놓았다. 또 한국노총은 등 5대 투쟁과제를 내세웠다. 양대 노총은 이를 위해 5월에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방침들은 입단투를 사회개혁투쟁과 결합시키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입단투가 조합원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가져올 수 있고, 입단투와 사회개혁투쟁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굳게 결의하는 것만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뚜렷한 목표설정, 안팎상황과 주체역량에 대한 냉정한 진단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양대 노총 모두 별다른 열기없이 총파업투쟁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올해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의 연결고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임단투다. 임단투야말로 모든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단투가 성공한다면 노동대중들은 자신감을 갖고 총력투쟁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임단투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전술을 어떻게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구태여 임단투의 기본목표를 든다면 요구조건의 실현과 함께 조직력의 확대 강화가 될 것이다. 조직력의 확대 강화는 기업내 현장 조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뛰어넘는 지역별·산업별 수준까지를 포괄한다. 기업 안에서는 교육·선전 활동과 대중토론을 활성화하여 움츠러들었던 현장의 조직력을 복원해내야 한다. 또 기업의 벽을 넘는 조직력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교섭권의 위임을 통한 교섭의 중앙집중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동교섭·공동투쟁의 단초가 되는 교섭권 위임은 중앙의 교섭위원을 파견해주고 몇번 교섭테이블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거나, 어려운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준에 그친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섭권 위임에 대해 그 방법과 과정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점에서 이번 임단투는 사회개혁투쟁의 진전을 추동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이 최대과제로 삼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내용을 채워가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